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28.(금) 11:00 < 3.29.(토) 조간 > 배포 2025. 3. 28.(금)

국표원, 정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인증 합리화를 위한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 및 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중이다.

* 1주기(`19.~) 통폐합 17개/186개 → 2주기(`22.~) 통폐합 11개/222개 → 3주기(`25.~`27.) 246개

이번 보고를 통해 향후 3년간(`25~`27.)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할 목록을 확정하고, 연도별 검토 계획 및 검토 중점방향을 제시하였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는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이며, `25년에 80개, `26년에 83개, `27년에 83개 제도에 대해 실효성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내용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등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안전/보건, 환경보호 등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	책임자	과 장	김태완 (043-870-5550)
		담당자	연구관	조춘강 (043-870-55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 개요

□ **[배경]** 정부는 전체 **인증제도** 대상 3년 주기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 운영중('19년~)

*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의 특성,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인증, 검사, 지정** 등을 포함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됨

인증	검사	지정	기타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벤처기업 확인	에너지효율표시

□ **[주요내용]** 각 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용되는 **인증제도**가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검토**

<실효성검토 항목>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법정제도로 유지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시장에서의 인증수요	▸유효기간, 비용, 기준 등 적절성 ▸국가, 국제표준과의 조화 ▸적합성평가기관 관리 적절성	▸근거, 대상, 범위 등의 명확성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절차 ▸위법사항 처벌근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절차 및 추진체계>

① 검토대상목록 확정	② 분석검토	③ 정비방안 도출	④ 정비방안 확정·이행
연차별 검토대상 목록 작성/보고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등 실효성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기술규제위원회 최종검토 등	인증제도 정비방안 최종 확정 및 부처 통보
각 부처-> 규제개혁위원회	각 부처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국표원)	규제개혁위원회

□ **[추진경과]**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업무 법적근거 확립('18년) 및 1, 2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실시('19년~)

○ 업무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정비* 및 **국표원(기술규제개혁작업단)**이 **사전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총리 **훈령**** 정비

* 「**국가표준기본법**」('18. 6.), 동법 **시행령 개정**('18. 12.)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8. 12.)

○ 1주기('19~'21) 186개 검토, **88개 정비안**(폐지 13, 통합 4, 개선 71) 도출, 2주기('22) 64개* 검토, **50개 정비안**(폐지 10, 통합 1, 개선 39) 도출

* 2주기 당초 검토대상 222개 중 '23년 79개, '24년 79개는 '24년 「인증 규제 정비」 방안(규제개혁추진단(국조실)이 인증제도를 원점 재검토)으로 대체됨

참고 2 소관 부처의 연차별 실효성검토 대상 제도 수

연번	부처	2025	2026	2027	합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	-	1
2	경찰청	-	-	1	1
3	고용노동부	3	1	1	5
4	공정거래위원회	2	-	-	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4	4	13
6	관세청	1	-	-	1
7	교육부	-	4	-	4
8	국가보훈부	-	1	-	1
9	국가유산청	2	1	-	3
10	국토교통부	10	15	16	41
11	기상청	1	1	1	3
12	기획재정부	-	-	1	1
13	농림축산식품부	5	7	9	21
14	문화체육관광부	5	1	3	9
15	방위사업청	-	2	2	4
16	보건복지부	5	4	5	14
17	산림청	2	5	3	10
18	산업통상자원부	7	8	8	23
19	소방청	2	3	-	5
20	식품의약품안전처	3	2	-	5
21	여성가족부	1	-	1	2
22	원자력안전위원회	-	-	1	1
23	중소벤처기업부	2	1	1	4
24	특허청	-	-	1	1
25	해양경찰청	-	2	-	2
26	해양수산부	11	10	11	32
27	행정안전부	5	3	3	11
28	환경부	8	7	11	26
합계		80	83	83	246